

윤대통령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이상민 경질엔 침묵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주제... 사고→참사·사망자→희생자로 표현 “책임자에 책임 묻겠다” 원론적 답변만... 경찰 수뇌부만 문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 간의 국가예도기간 종료 이후 첫 공식 회의인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도에서 안전 관리체계 혁신으로 국정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 이후 공개석상에서 ‘일상 회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고 직후 합동분향소를 열고 전국민적 예도 분위기에 함께 한 정부가 이제는 예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사망자 빈소와 분향소를 날마다 방문해 참배하고, 불교(4일), 개신교(5일), 천주교(6일)의 추모행사에 참여해 온 윤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정상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중견 기업인의 날 행사장을 찾아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조한 것도 그것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있을 윤 대통령의 해외 외교 행사 순방 일정을 소폭 축소하되 가급적 예정대로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윤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도마 위에 오른 인파 또는 군

중 관리,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를 후속 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있었으나 주변 차도를 막아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인파 관리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야권이 지속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한 답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사망자 빈소에서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조계사 법회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야당으로부터 공식 사과 요구를 받아온 터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각각 표현했다.

이 역시 정부가 소극적 용어를 선택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는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및 검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를 놓고 야당에서 분출하는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장관은 일단 유임시키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임미란 시의원 “광주 자치구 특별교부금 편차 커”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2) 의원은 7일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별로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4년간 광주시가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1552억 7500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간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가 406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334억 5300만원, 광산구 307억 1600만원, 동구 252억 1200만원, 남구 249억 4600만원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특교금이 오히려 줄



어 자치구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단체가 특교금 신청을 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검토해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며 “특별교부금 성격에 맞게 신청하면 되는데 사유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곳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권일 기자 cki@

김용임 시의원 “수소충전소 제한고시로 시민 불편”

광주시의회 김용임(비례·국힘)은 7일 “광주시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이 일부 지역의 남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지역을 제2순환도로 밖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수소차 이용자들이 도심 밖으로 이동해 충전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동구



2기, 서구 5기, 남구 3기, 북구 7기, 광산구 8기 총 25기 구축하게 되어 있지만, 충전소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동구는 2025년까지 구축 계획이 없고, 남구와 북구도 추가 구축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설치 지역 제한 고시는 2045 탄소중립의 역행하는 규제다”면서 “광주시가 환경을 보호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

野 “책임자 문책”... 與 “재발 방지”

문체위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 지적·후속 조치 주문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공연장에서는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데, 문체부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에서 열리는 K팝 공연에는 수만 명이 참여해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 과정도 지적했다.

민중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광장성) 의원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즘 국민 노릇하기 두렵고 참담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가 외신과의 언론 소통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로 박보균 장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간담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농담하고 웃고,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 매뉴얼을 리뉴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 문체위 차원에서 별도 시간을 내 보고를 받고 타 부처와 연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종합적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지역 축제와 관련해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과 문체부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타 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진행해주시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보균 장관은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축제는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백정란 고발 검토”

〈질병관리청장〉 복지위 “서류 제출 거부·국감 위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백정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시경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정란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백정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백정란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데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신데카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정란의 이해충돌 논란은 증폭됐다.

백정란은 결국 지난달 28일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이는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 복지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과수원으로 총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